

<2018년도 제3회 학봉상 공모연구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저출산 사회의 자녀 양육 부담: 교육비와 출산 결정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송아영(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유선(고려대학교 국정설계연구소)

목 차

제 1 장 서론	3
제 2 장 연구 배경	6
1. 한국의 교육열 현상	6
2. 국내 저출산 정책 동향	10
제 3 장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17
1. 해외출산결정원인분석 문헌연구	17
2. 한국출산결정원인분석 문헌연구	19
3. 양육·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문헌분석	21
제 4 장 연구 방법	23
1. 연구자료	23
2. 연구방법	26
제 5 장 연구 결과	28
제 6 장 결론	35
참고문헌	37

저출산 사회의 자녀 양육 부담: 교육비와 출산 결정의 상관을 중심으로¹⁾

문아람(정보통신정책연구원)²⁾
송아영(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유선(고려대학교 국정설계연구소)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부담과 출산 행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예측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추정하여 출산 여부 및 출산아 수와의 관계를 로짓 모형과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출산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을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으로 나누면, 사회경제학적으로 높은 수준인 가구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는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키워드: 저출산, 사교육비, 출산행태, 자녀양육부담, 한국

제 1 장 서론

1980년대 초반 한국의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은 인구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 2.1 이하로 기록된 이래, 1990년대 1.3 이하를 유지하며 저출산 (low fertility) 국가로 진입하였다. 특히 최근의 출생아 수 급감³⁾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15~64세)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생산인구 감소는 국가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와 사회보장비용 지출 증가

1) 본 연구는 학보장학재단을 통해 제3회 학보장 연구부문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2) 교신저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e-mail: ahrmoon@gmail.com)
3)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로 가장 낮은 TFR을 보였으며, 2000년에 약 63만명이던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 7771명으로 집계되어 최소값을 기록하였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삼식, 최효진, 2014; Sleebos,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초저출산 (lowest-low fertility) 국가로 분류되는 등 출산율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실제로도 2017년 6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 명 이하로 조사되는 등 앞으로도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한국의 저출산 연구는 일찍이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서구 유럽에서 발달한 이론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시행 결과 실제로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2015년 TFR이 약 1.9의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출산율 회복을 경험하였으나, 여타 국가들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와 출산율 회복의 정도가 다름이 발견되었다. 이에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Hoorens 외, 2011).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정체되어 온다는 점에서, 기존에 발달한 저출산 이론을 답습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행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Anderson & Kohler (2013)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저출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육열 (education fever)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인 급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에서 교육은 개인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사회계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의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사회가 다층화 되어 갈수록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불안감과 우려는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관련 지출의 증가를 유발하여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여 왔고, 교육열 현상 속에 학생들 간의 성적 경쟁, 대학의 서열화, 학벌주의 및 교육 기회 불균등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교육열에서 비롯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Ogawa 외, 2015). 자녀의 교육비 부담의 증가는 자녀 양육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부부의 생애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4배 증가함에 비해 동기간 자녀교육비 지출은 약 6배 증가하였으며, 2011년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3%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규 외 (2011)는 가계 부채가 있고 소득-지출관계가 적자임에도 자녀 교육비를 표본

집단의 평균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약 13%로 조사되었다. 유경원 (2010)은 자녀 교육비 부담분이 가계의 현재 소비행태 및 미래소비를 위한 저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생애 주기에서 결혼과 출산 단계에 진입한 청년 세대들에게는 자녀로부터 얻는 효용보다는 자녀를 위해 과중한 경제적 지원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자녀 교육비 부담은 경제적 부담 및 불안감을 증가시켜 균형적 삶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부모의 출산 의지를 감소시킴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간과했던 한국의 교육열과 사교육비 부담이 실제 부모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가구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을 예측하여, 기대교육비용이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로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출산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규 출산 여부와 신규 출산 자녀수와 자녀에 대한 학령별 기대교육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분석 대상을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으로 나누면, 사회경제학적으로 높은 가구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잃으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하위 50%에 속한 가구에게는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결과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인 한국의 교육열 현상과 저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은 저출산과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자료와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제5장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언한다.

제 2 장 연구 배경

1. 한국의 교육열 현상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률과 높은 교육수준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공교육 체계 안에서의 교육비투자가 아닌 사교육 영역의 확대와 투자로 인한 교육비 투자 및 교육열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주요 지표로서 활용되나 그 교육 수준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기회로서의 투자가 아닌 사적 교육시장의 확대와 이에 대한 과도한 투자현상으로 점철된 한국의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 에 따라 인간을 주요한 투자를 통해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이해하고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적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투자는 교육이 대표적으로 교육과 투자를 받은 개인은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본론은 서구의 교육체계와 교육투자 개선을 위한 주요한 이론적 틀로서 활용되었으며 기술적 변혁, 연구, 혁신, 생산성, 교육, 그리고 경쟁이라는 주요한 개념 안에서 교육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Fitzsimons, 2015). 마강래 외 (2016)는 이에 따라 높은 임금이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체 사회의 교육 투자 수준이 매우 낮고 교육 성취 수준이 낮은 사회의 경우, 이러한 인적자본론을 근거로 교육 투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Olaniyan & Okemakinde, 2008), 이미 높은 교육성취를 보여주고 있고 교육 투자가 사회 전체적인 거시적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인적자본론적인 인식이 오히려 왜곡되어 부모들을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여유진(2008)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유연성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과 투자에 의해 결정되며 가계의 경제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열로 인한 교육비투자가 사적영역에서 확대된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이는 큰 사회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교육비 투자는 공교육 투자와 사교육 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교육 투자는 대부분 공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수준의 투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의 경우 공교육에 더해 개인이 선택하는 추가적인 형태의 교육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다면 결국 개개별 가구는 사교육의 투자에 가계경제

및 다양한 선택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가구별 교육에 대한 열망과 투자에 대한 의지는 주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사교육 투자와 현황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교육열의 문제화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1) 한국의 교육비투자 현황

한국 공교육비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부담, 즉 공적투자영역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띄는 특징이 없으나 공교육비에 민간부담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서비스, 2015). 또한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의 경우 초중등교육과정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가구별 교육비 지출의 핵심인 사교육비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24.0%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치임이 확인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70.5%에 달했으며 이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82.3%, 중학교의 경우 66.4%,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55.0%로 점차 비율이 줄어들기는 하나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방과 후 돌봄 욕구와 관련하여 비교과적인 활동(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의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며 고등학교 때의 참여율 감소는 직업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의 반영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고등교육(tertiary)이나 고등교육 이외 교육 전반적으로 교육비의 사적영역 지출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이전의 교육에서의 사적 교육 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국가 전체적인 사교육비 추정으로 확대해보면,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약 3.1%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적인 총액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교육 참여율 역시 2.7% 상승한 수치이며 사교육 참여시간은 2016년 6시간에서 2017년 6.1시간으로 미비하게 상승하였으나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참여시간 모든 영역에서 2016년에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2.7% 감소) 것이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으나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일인당 사교육비 수준이 더욱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열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 내 교육열이 아직도 강력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다는 점이다 (통계청, 2017). 2017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의 가구의 경우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45.5만원이었으며 참여율 역시 83.6%로 가장 높았다. 이를 저소득 가구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와 비교해보면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9.3만원, 참여율은 43.1%였으며 2~300만원 구간의 가구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5.3만원, 참여율은 58.3%로 소득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교육비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교육비 투자 규모가 상당하나 공교육투자의 경우 그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교육의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열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 교육비 투자 형태는 결국 가구 내 소득구조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과 영향이 밀접할 수밖에 없다.

박종서(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지출은 가장 높은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둔화된 소득증가 패턴 속에서 결국 전체적인 소비 형태의 둔화와 수축을 야기한다. 특히 이러한 교육비지출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어, 가구의 소득규모에 따른 교육비지출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연구로 박문수 외 (2014)는 2013년 가계 소비지출액을 검토한 결과 소득5분위 가구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교통비 지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여 주된 소비지출임을 보여주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비교적 낮은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소비지출 영역보다 교육비지출 영역의 증가 폭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현재의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비 투자는 단순히 어떤 집단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소득집단에서, 자녀가 있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매우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열로 인한 사회현상

다음으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과 관련한 교육열로 인한 사회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육비지출로 인해 가구 소비의 많은 부분을 교육비가 차지함에 따라 다른 형태의 소비가 위축되고 전체적인 가계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교육열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박종서 (2015)는 이미 많은 가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양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중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교육비지출로 인한 소비위축은 현재의 소비 행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 등의 미래 소득 및 소비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대비 교육비 비중이 높은 가구의 경우 이에 상응하여 연금이나 보험 등과 같이 노후대비에 필요한 저축이나 준비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복, 이석호, 2017).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집착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수준이 모든 다른 경쟁력을 앞선다고 믿고 교육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국 성공이라 믿는 지나친 교육열의 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비지출이 모든 소득집단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기는 하나, 그 규모나 참여율 정도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보다 거대하고 집중적으로 나타나 교육기회, 그리고 교육결과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지출은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여유진(2008)은 이러한 사교육에서의 지출 격차,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세습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지위의 고착화는 경제적 능력의 직접효과보다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교육기회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이동의 기회에 있어 경직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재완(2013)은 조사대상자들이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신뢰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계층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상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사회신뢰가 줄어드는 비선형 형태의 관계가 확인되긴 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사회신뢰를 위해 계층상승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슷하게 이하영과 이수영 (2016)은 그들의 연구에서 계층상승에 대한 주관적 가능성 인식이 정부신뢰나 국가에 대한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상승이 보장되었을 때 정부 및 국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교육비지출에서 발견되는 불평등과 지출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계급의 고착화 및 세습의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사회 전체적인 신뢰의 저하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어 사회발전의 계기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유진 (2018)은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사회는 폐쇄사회(closed society)로서의 성격이 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고착화되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사교육비지출과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소득불평등이나 사회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대상일수록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았으며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행복감이나 삶의 의미에 있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차문경, 이희태, 2017). 즉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사회에 대한 불안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지표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구조의 불안정성을 내포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내 자식만 뒤처지면 어찌나?’ 라는 보편적인 불안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러한 경우 오히려 사교육과 교육비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모 스스로 교육열에 속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교육열에

속박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무리한 교육비 투자를 함에 따라 부모들은 심적 부담을 받게 된다. 중년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무리한 교육비지출을 하는 경우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하위소득 집단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선정, 김정석, 2017).

통계청 (2017)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이 사교육 분야에 참여해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아동권리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육비지출의 직접적 결과는 아닐 수 있으나 교육비지출로 인한 사교육 및 과도한 교육경쟁에 참여한 아동들이 이로 인해 부정적 발달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겨레 2016년 3월 3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아동들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여주었음을 기사화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을 100으로 두었을 때 스페인의 경우 가장 높은 118점의 행복지수를 보여준 반면 한국은 82점으로 매우 낮았다. 한국 아동의 낮은 행복지수의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교육압박과 학업스트레스가 지적된다. 아동들은 행복지수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발달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되는데 노충래, 김설희 (2012)는 중학생의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보여줌을 밝혔다. 이에 더해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고 자살생각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발달결과를 경험 한다 (김성현, 주동범,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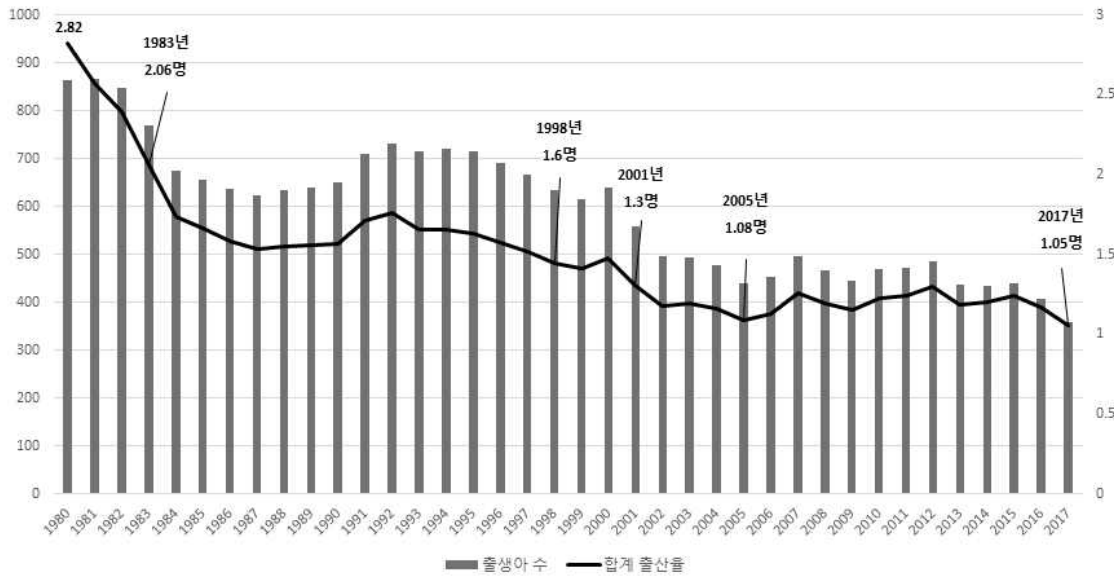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은 이렇듯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규모의 위축 뿐 아니라 가구 소득수준과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교육비지출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의 기회에 있어 차등적 경험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의 유연성과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줄이고 고착화된 사회로의 발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 분석 결과 나타났다.

2. 국내 저출산 정책 동향

1)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및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그림 1>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산출산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08명으로 떨어짐에 따라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로 떨어지는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홍찬숙, 2013). 이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05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초로 0명대인 0.96~0.97명으로 예상 집계되고 있다.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80~2017년)



출처: 통계청, 『2017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주: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임.

우리나라는 2005년에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08명 및 2006년에는 1.10명을 기록하고, 노인인구부양비율(65세 이상인구 대비 15~64세 인구비율)도 2005년 12.6%에서 2050년에는 72.0%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06년에는 5개년 계획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였다(박석희, 2007). 이후,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이, 그리고 2016년부터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이 수립·시행되었다.

〈표 1〉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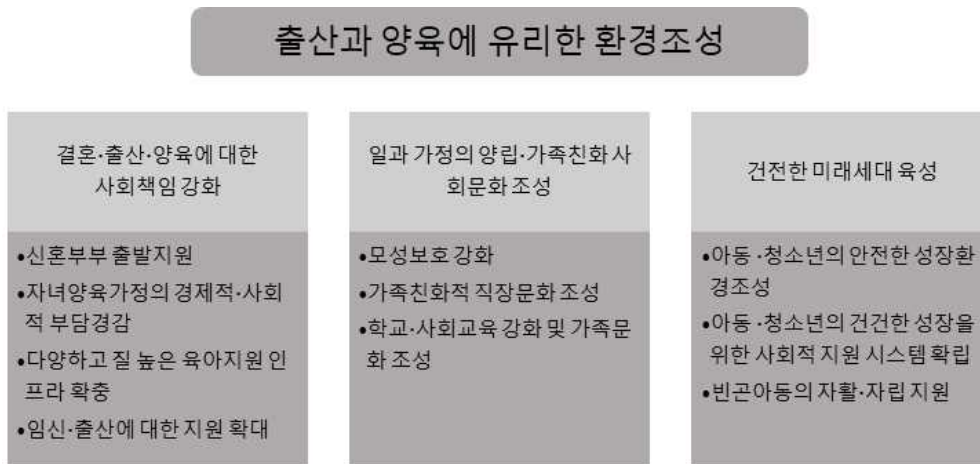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구성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9.1. 시행)
2005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출범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수립
2008년 11월	제1차기본계획 보완판 수립
2010년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수립
2015년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수립
2016년 8월	제3차 기본계획 보완 대책 발표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 재출범

출처: 김종훈 (2018), pp. 9.

2) 제 1차 및 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은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주된 전략적 목표로 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 친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추진하는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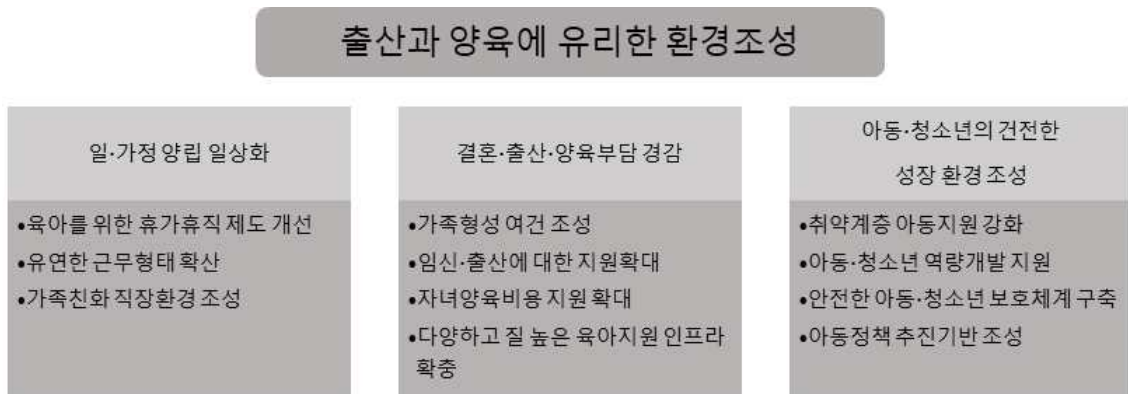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정부 (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p.58.

제 1차 기본계획은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육아 지원 시설 등의 자녀 양육환경의 미흡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장애요인의 제거를 저출산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정부, 2008).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미혼모·미혼부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 지역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산 등이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정책의 주요대상은 저소득 가정이었고, 보육 지원관련 정책들이 기본계획의 중심을 이루었다 (변수정, 황남희, 2018).

그러나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한 제 1차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반등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1.08명에서, 2009년 1.15 명으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추세는 저지하였으나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정부, 2011). 제 2차 계획에서는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부족 등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와 같은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등 3대 방향으로 구체적인 세부 추진정책으로 설정되었으며, 육아휴직제 개선, 야간 보육 및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 보육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양육수당 확대 등 자녀 양육비용 지원을 대폭 강화,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 후 돌봄 확충, 보육시설 평가 인증결과 공개 등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 제 2차 중점추진 과제와 목표는 제 1차 기본계획 당시와 비슷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림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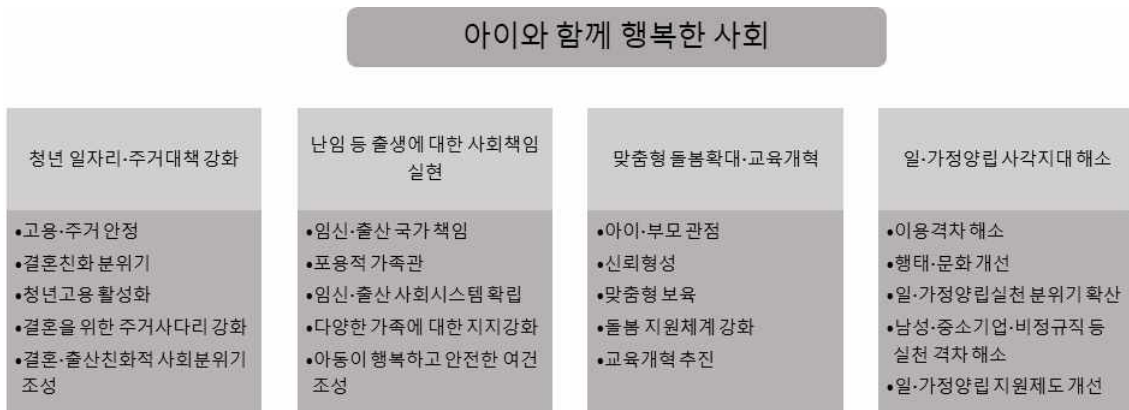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34.

제 2차 기본계획은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기존의 1차 계획이 보육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가족 양립 지원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강되었다 (변수정, 황남희, 2018).

3) 제 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2016-2020)

2004년 이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 하고 예산을 적극 투입 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세계 금융 위기 등의 외부 환경 및 만혼 심화 등 으로 합계 출산율이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초저출현상이 지속되었 다. 제 1차 계획에 19.7조원, 제 2차 계획에 61.1조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1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며, 무엇보다도 다른 OECD 국가들이 합계출산율을 1.7명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반 해,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 2016). 제 1차, 2차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출산율에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에서는 저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동안의 정책이 양육비용 지원 중심 의 미시적 대책에 그쳤다면, 제 3차 계획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저출산 현상의 근본 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구조·문화에 대한 해결책에 좀 더 집중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1, 2차 기본계 획의 정책 목표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었다면, 제 3차 기본계획의 목 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현상적인 보육중심 대 책으로만은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드러냄을 인식하고, 노동시장·교육·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와 일가족 양립을 위한 문화대책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구체적인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55.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 제 1차와 제 2차 기본계획이 내용상 자녀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비혼·만혼 등의 젊은 세대의 혼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현상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일자리나 주거와 같은 문제 요인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변수정, 황남희,

2018). 이에 따라,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전의 계획들보다 특히 부모의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폭넓게 실시되었다.

〈표 2〉 제 1·2·3차 기본계획 보육 및 육아관련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비교

	제 1차(2006~2010년)	제2차(2011년~2015년)	제3차(2016년~2020년)
보육 및 돌봄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 확충, 민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간제 보육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의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초등돌봄 강화, 지역사회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내실화
보육·교육비	만 4세 이하 차등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및 저소득층 지원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 양육수당 지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구조 개혁, 다자녀 장학금 지원

출처: 변수정, 황남희 (2018), p.46에서 발췌.

먼저, 보육 측면에서는 이전 1·2차 계획을 통해 전 계층 무상 보육의 실시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은 강화되었으나, 취업모를 위한 늦은 시간까지의 보육 서비스는 여전히 부재하는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15%, 전체 이용 아동의 28% 수준에 머무르며, 낮은 보수수준 및 장기간 근무 등의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보육 교사 질 저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등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및 관리 체계의 부족 역시 큰 문제로 지적 되어왔다. 이에 따라,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 및 행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6~8시간) 서비스를 신설하여, 질병·병원방문 등의 긴급한 보육 수요 발생 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하여,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전체 보육 아동의 45%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을 통해 취

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의 돌봄 여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자녀에 대한 양육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 역시 제 3차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차 기본계획이 이전의 계획들과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교육 개혁 추진을 세부정책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7.4%로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2.2%보다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높은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이 심화되고, 고착화된 대학서열, 학력 간 임금격차 등의 요인들로 인해 사교육을 외면할 수 없는 문화는 젊은 층으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기본 계획에서는 사교육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삼고, 교과과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기반 조성,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추진을 통해 일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사교육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공부 만으로도 입시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학원비 등을 학원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확대를 통해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하고, 대입전형의 간소화와 대학별 전형계획에 대한 사전예고 기간 준수 등을 통해 대학진학의 부담을 완화 한다는 입장이다(대한민국정부, 2016). 이와 같이 육아 및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 3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은 결국, 한국의 교육열 현상으로 인한 부모의 재정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3 장 출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1. 해외출산결정원인분석 문헌연구

저출산이 20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발달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구학적인 변화임에 따라 (Adsera, 2004; Morgan & Taylor, 2006), 그 현상과 원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Adsera, 2004; Castles, 2003; Hakim, 2003; Hirschman, 1994; Morgan & Taylor, 2006; McDonald, 2001; Myrskylä et al., 2011). 저출산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설명은 경제학적 관점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Becker, 1991; Hilgeman & Butt, 2009).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도 연결되는데, 합리적 선택이론은 자녀가 주는 이익 대비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출산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성낙일, 박선권, 2012). 양육으로 인해 소비되는 보육관련 지출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시장소득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여성은 출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직·간접적인 비용이 클수록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Becker, 1981). 합리적 선택이론이 여성 혹은 가정이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경제적 변수를 바탕으로 출산행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면, 위험이론(risk theory)은 개인의 출산결정은 경제위기 및 경기변동, 직업 안정성 등의 외부 요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성호, 2009). 현대인들은 경기 변동과 낮은 직업 안정성, 높은 직업 이동성, 물가 상승 등의 삶의 불안정성이 증대된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데, 경제적·사회적·개인적인 미래가 불투명 할 경우,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불안정성 (일자리 박탈, 소득 감소, 경제적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선택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성호, 2009; 성낙일, 박선권, 2012). 사회경제학적 요인 외에도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들도 저출산 연구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남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부양자가 되고 여성이 집안일을 맡아서 하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 유지되던 시기에는 가족제도의 공고화를 통한 출산력의 유지가 가능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이 시장에서 남성들과 같이 경쟁하며 노동시장 참여를 이루는 등의 강한 가족주의가 해체되면서, 출산율이 감소했다고는 것이다 (정성호, 2009).

이와 같은 사회경제학적·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저출산 이론들은 주로 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여성의 인적 개발이 진행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나, 20세기 후반에는 오히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Kim, 2014; Martin, 2000). 여성의 성평등적 가치관으로 인해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본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반대로

성평등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성숙한 국가들에서 출산율의 반등이 나타나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이에 따라, 양성평등 수준이 출산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 영향을 미친다는 양성평등이론(gender equity theory)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양성평등이론의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인 McDonald(2000)의 연구는, 저출산은 사회 내와 가족 내의 성평등주의적 제도화가 서로 상충될 때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지향적인 제도들(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은 성평등성을 이루었으나, 가족 내 양육과 돌봄 내동에 대한 가족지향적인 제도들(family-oriented institutions)은 성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체제에 머물러 있을 때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McDonald, 2000). 단순히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의 여성개발지수의 상승 때문에 저출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는 성평등성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는 엄마가 꼭 키워야 하고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문화가 지배적일 때,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적게 출산하도록 하는 저출산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 문화나 경제구조는 성평등적으로 변해가는데 반해, 가족 내 가치관이 변화하지 못해서 아이 출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양성평등이론은 설명하고 있다 (홍찬숙, 2013). 이 같은 양성평등이론은 특히 가부장적인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초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양성평등 및 일과 가정의 조화 정도가 낮고, 아동 양육자로서의 엄마의 역할이 압도적이며 가족유대가 강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 참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가족 내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와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여, 여성이 결혼 후 출산을 할 경우 경력을 단절하고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성평등이론에서는 이런 경우에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저출산은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사회구조적으로 강압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찬숙, 2013).

앞의 설명들이 저출산을 인구경제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면, Hakim(2000)의 경우 여성 개인의 선호의 변화라는 문화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고 있다. Hakim (2000, 2003)은 저출산을 설명한 이전의 이론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혼인연령, 교육연수 등의 변수 중심 설명이었던 점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은 일과 가정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지니고 있으며, 여성 개인이 일과 가정 중 어떤 삶의 방식을 더 추구하는지(lifestyle preference)에 대한 선호에 의한 선택으로 출산행태를 설명하는 선호이론(preference theory)를 제시하였다. Hakim(2000, 2003)은 5가지 사회적 변화 - 피임, 남녀간 기회균등, 화이트 칼라 및 파트타임 직업의 확산,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 가 일어남에 따라 여성들이 본인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현대

여성의 일과 가족에 대한 선호가 변화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이론들에 비추어 각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박휴용와 여영기(2014)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우는 위험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혼령기 젊은 층이 안정된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과 미래 상황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만혼 및 독신주의가 팽창하여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경제적 불안감이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독일의 경우는 공공 어린이집의 부족으로 인한 양육 부담으로 여성들이 출산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프랑스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적인 일·가족 양립 문화의 구축은 물론이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등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한국출산결정원인분석 문헌연구

한국의 출산결정원인분석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된 200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측면의 저출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앞서 소개된 다양한 서구 이론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구의 경제적 여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과 배우자의 혼인연령 및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 특성,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양육부담·스트레스, 일가정 양립 가능 여부, 자녀 양육 지원 제도 등의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런 요인들이 실제 출산과 출산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김선숙, 백학영, 2014; 정성호, 2009)

김정석(2007)은 여성의 출산 행위는 비용편익(cost-benefit)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삼식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20-44세 사이의 기혼 여성 중에서 첫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은 7.2%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첫 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은 극소수이며, 둘째아부터는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출산행위가 선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김정석(2007)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의 35세 이하 기혼여성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출산아수별로 출산 계획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첫째아 계획은 이삼식 외(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아계획은 경제와 양육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먼저, 남편의

종사상 지위(임시/일용 vs. 상용직)가 둘째아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남편이 임시 혹은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직장을 가진 경우에는 둘째아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정어머니의 생존이 둘째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보조자의 존재 여부가 추가 출산에 중요 요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아 출산계획의 경우 남아의 존재여부와 이상자녀의 성 구분이 중요 요소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출산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출산아수별로 출산 행위의 기제가 다름이 밝혀졌으며, 특히 둘째아 출산부터는 그 행위에 자녀의 수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및 양육비용 증가와 같은 경제학적 요인 및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담감이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요인 및 양육조건은 출산행태에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출산행태에 주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성은과 우석진(2009)의 연구는 고용안정과 높은 소득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김현숙(2007) 역시 가구소득과 출산율의 긍정적 관계를 증명하였다. 반대의 경우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손승영(2005)의 연구와 정성호(2009), 이보라(2017) 등의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주된 요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열에 의한 자녀양육 부담이 결국 적은 자녀수로 연결된다는 김영주(2005)의 연구 역시, 경제적 영향과 출산이 높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이 고용의 불안정성, 주택가격 상승 등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시기를 늦추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정운태, 2018), 경제상황이 일정하게 회복된 외환위기 이후에도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출산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오유진·박성준, 2008; 배정연·홍석자, 2010)들이 제시되면서, 경제적 요인보다 다른 요인들에 저출산의 원인을 주목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앞서 소개한 양성평등이론에서 McDonald(2006)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출산과 양육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성별분업의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의 경우, 이전 세대의 여성보다 교육의 기회 및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전통에 기초한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결국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 출산 시 경력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안정망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는 출산을 포기하게 되어 이것이 초저출산의 중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성호, 2013). 한국의 저출산 역시 이와 같은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및 소득활동 단절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홍찬숙, 2013). 실제로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인해 취업 여성들이 더 적게 출산한다는 실증연구들이 뒷받침되었다

(민현주·김은지, 2011). 특히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 그래프가 30대에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이후 40대에 다시 복귀하는 M-curve 모형을 나타냈다.(이삼식·최효진, 2014),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경제 및 문화적 요인들이 한국 저출산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같은 한국 고유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3. 양육·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문헌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양육교육비와 출산율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출산율과 관련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유례없는 교육비 지출과 이에 대한 가구의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교육부담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미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걱정하기 이전인 2000년대부터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연구들이 이어졌는데 (이삼식외, 2005; 이인숙, 2005; 신윤정 외, 2008) 자녀 보육과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라서 교육비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보다는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숙, 2005).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산율과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용의 상승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96.1%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외 (2008)의 보육·교육비 부담과 출산율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적은 가정일수록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 자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지속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조사결과 향후 자녀 출산계획이 있는 경우는 24%에 해당하였으며 다수의 76%는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출산의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모든 소득구간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에 대해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는 적절한 비용이 제공되었을 때 비용 지원정책에 만족을 느끼게 되고 이는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희, 2010). 관련하여 신윤정 (2008)의 연구에서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이 이루어진 경우 보육비나 유치원비의 절감은 자녀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4)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은 보육비에 대해서는 70%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 보육체계에서 유치원을 선택한 경우 80%의 부모가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다소 낮은 75%, 중학교는 80%,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약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외, 2008).

미치게 되나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비 절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보육비나 교육비의 부담과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교육열과 관련한 자녀 교육부담과 출산의 관련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김경근, 최윤진, 2017), 출산을 회피하거나 추가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나타났는데 경제적 요인으로는 사교육에 경쟁력 있게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이들의 출산결정이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모두 중산층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은 일종의 불안감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과 걱정에서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 하거나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본인이 특별하게 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현재 보육·교육 체계에서는 보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언급도 있었다. 특히 한 자녀 부모의 경우 중산층이라는 경제적 여유 배경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자녀 출산은 기피하나 현재의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올인(all-in)식 교육투자 및 양육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나만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아이를 낳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자 무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다자녀일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게 되나 한국의 경우 뚜렷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위 소득 집단의 경우 여성의 취업비율이 높기도 하며 자녀 수 자체도 중산층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생애 총 자녀수에 있어서는 소득구간 25~75% 집단에 비해 상위소득 25%의 집단이 더 낮은 수를 보여주었다 (김은정, 2013).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한국적 특수성을 적용시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라도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고,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추가 출산을 회피하거나 주저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출산을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 자녀가 없어 보육이나 교육비 지출 경험이 없는 미혼 남녀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2년 전국 결혼 및 동향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전국 미혼남녀들의 경우 결혼 필요성 자체를 60% 정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남녀들의 자녀수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경험한 기혼 여성들 역시 추가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용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렇듯 교육비 부담은 미혼남녀부터 자녀가 있는 기혼가정까지 폭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가구가 현재 지출하는 영유아 보육비 혹은 청소년기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기혼 가구가 예상하는 기대교육비용과 실제 출산 행태의 관계를 보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를 활용한다. 본 연구 분석의 주요 변수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지출 비용과 출산력 등이다.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출산 결정 요인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온 부모의 교육 및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해 가구의 인구경제학 변수도 함께 포함된 자료가 요구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2단계 집락계통추출법(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구성하여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 수집 기간이 길어지며 조사에서 이탈하는 가구로 인한 표본수가 감소되고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 추출로 인해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2009년에는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을 위해 표본을 추가를 하여 통합표본은 총 6,721가구이다. 1998년을 1차조사로 시작하여 현재 19차 조사(2016년)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⁵⁾

KLIPS 자료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해당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용 자료로 나뉜다. 가구용 자료에는 가구원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의 인적사항, 주거상황,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 등 경제 상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근로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된다. 따라서 KLIPS에는 분석에 필요한 가구당 자녀의 교육·보육 비용 지출 상황, 가구의 출산 자녀 수 및 출산 시기, 그 외 인구경제학적인 변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패널 자료로서 개인/가구별 시간가변적(time-varying)인 변인(예를 들어, 노동참가행태 혹은 소득 등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을 함께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KLIPS를 주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기대양육비용이 향후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본 연구는 19차 KLIPS에 포함된 가구의 이전 5년간 출산 행태 변화에 초점을 둔다. 5개년 전 자료(15차, 2012년)를 기준으로 가임기 여성으로 볼 수 있는 만 19세에서 40세의 어머니가 포함된 각 가구의 자녀 1인당 기대양육비용을 추계하여 해당 가구의 2016년까지 출산력과의 관계를 본다. 따라서 KLIPS 15차에서 19차 개인용 및 가구용 조사를 합쳐서 이를 5개년 패널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15차

5) 본 연구는 2018년에 수행되어 KLIPS는 19차 조사까지 공개되었으나, 보고서 발간 현재 2019년에는 20차 자료까지 공개되었다.

조사에서 어머니의 연령에 관계없이 영유아와 취학 아동(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실제 지출하는 양육 및 사교육비 비용을 조사하여 이를 15차 당시 가구가 예상하는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비용을 추계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KLIPS에서는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실태와 비용’에 대해 2차 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조사하였으나 조사 내용과 대상에 차수별로 일부 차이가 있다. 1차 년도에는 조사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로 한정하였으나 3차 년도부터 0세에서 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특히 7차 년도 이후에는 대학생 자녀도 포함하여 정규 학교 등록금도 함께 조사한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 당 보육기관 및 사교육 참여 여부와 이용 개수, 고등학교 이하 자녀 당 월평균 수업료 정보가 조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녀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그룹에 속한 자녀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실제 가구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용 변수로 활용한다.

KLIPS에서는 가구 내 각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와 월평균지출 비용을 함께 조사한다. 사교육 종류에는 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돌보미서비스, 온라인 강의, 영어캠프 등 어학연수, 취학자녀가 이용하는 방과후 교내·외 보충활동 등이 포함된다.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 공통으로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온라인강의, 영어캠프 등 어학연수에 지출하는 비용이 사교육비 비용으로 집계한다. 가구 내 0세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특히 위의 공통 영역인 사교육비와 더불어 보육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거나 보육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자녀의 부모, 가족 혹은 친지,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에게 지출하는 추가비용도 더하여 자녀 1인당 사교육비를 계상한다.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공통 사교육비와 함께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및 교외 방과 후 교실 지출 비용을 더하여 취학 자녀의 1인당 사교육비로 한다.

출산 행태분석에 사용하는 주요 종속변수는 자녀의 수 (quantum)와 관찰기간 동안의 신규 출산 유무이다. 종속변수로 자녀의 수를 활용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재생산 (reproduction) 결정이 마무리 된 것으로 간주되는 41세 이상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완결출산력 (completed fertility)을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체 여성들이 관찰기간동안의 출산아 수도 함께 종속변수로서 살펴보게 된다. 재생산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여성의 연령은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주요 분석에서는 41세를 기준으로 하나 강건성 확인에서는 그 연령의 기준을 달리 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재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의 신규 출산 여부도 살펴보아 기대교육비용이 추가출산과 연관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기초 통계량은 아래의 <표 3> 과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각각 38.6세와 41.4세이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에 속한 어머니가 5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28.3% 이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은 약 40.5%로 나타난다. 가구당 15차 당시 평균 자녀의 수는 1.7명이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약 1.4명 존재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고등학생 자녀는 약 1.1명 존재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 포함)는 약 32만 1천원이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중학생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28만 7천원으로 다른 학령기 자녀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초 통계량

	표본수	평균 (비중)	표준편차	최소	최대
어머니 연령	2,155	38.6	6.1	21	57
아버지 연령	2,155	41.4	6.5	24	67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85	50.4		0	1
2년제 대학 졸업	460	21.4		0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10	28.3		0	1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902	41.9		0	1
2년제 대학 졸업	380	17.6		0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873	40.5		0	1
자녀수	2,155	1.7	0.6	0	4
미취학 자녀	1,020	1.4	0.5	1	3
초등학생 자녀	865	1.3	0.5	1	3
중학생 자녀	504	1.1	0.3	1	2
고등학생 자녀	513	1.1	0.4	1	3
연간 가구 소득(10,000원)	2,123	4632.4	2848.4	120	48000
자가 소유 여부	2,155	0.6	0.5	0	1
거주 지역					
서울 및 광역시	408	18.9		0	1
중소도시	120	5.6		0	1
그 외 지역	1,627	75.5		0	1
월평균 사교육비(10,000원)	2,155	32.1	34.8	0	315
미취학 자녀	1,016	19.6	20.5	0	153
초등학생 자녀	859	26.2	23.3	0	315
중학생 자녀	499	28.7	26.8	0	158
고등학생 자녀	513	24.4	32.8	0	175
전체	2,155				

주: 본 표는 15차 대상; 미취학, 초, 중, 고등학생 자녀수 및 사교육비의 평균 통계량은 가구 내 각각 해당 자녀를 포함한 가구만 대상으로 함; 연간 가구 소득 및 월평균 사교육비의 단위는 10,000원.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모가 장래 자녀에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교육비용에 의해 출산 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으로 기대교육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 농무성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자녀양육비용 추계 시 사용하는 1인당 비용 측정 방식을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다. USDA에서는 소비자 지출 자료(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바탕으로 자녀에 해당하는 지출(교육, 의복 등)과 가족 공통 지출 항목(음식, 주거, 의류, 교통, 건강 등)을 분류하여 각각의 지출을 종속변수로,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득 수준, 가구원수, 막내자녀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다. 그 결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가구가 자녀 1인 양육하기 위해 지출하는 항목별 비용이 추계된다. 신윤정과 김지윤 (2010)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녀양육비용을 추계하였으나 USDA 방식과 신윤정과 김지윤 (2010)은 자녀가 소비하는 음식, 주거, 광열비 등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열이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른 자녀양육비를 제외하고 사교육비 항목에 초점을 둔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을 예측한다. 이를 결측치로 처리하는 대체(imputation)방법으로 예측평균매칭(predictive mean matching, PMM) 접근법을 사용한다.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결측치 처리는 이전 차수 자료 존재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관찰 시점 이전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관찰되지 않으므로(가임여성 대상으로 하여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녀의 학령 외의 학령기별 사교육비는 수집할 수 없음) 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전 차수에 정보가 없으므로 횡단면 자료에서 활용하는 대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지출비용이므로 연속변수라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MM 접근법을 활용하여 자녀가 없거나 어려서 가구들의 사교육비 변수 결측치를 대체한다. 최근방 회귀대체(nearest neighbor regression imputation) 혹은 예측평균매칭 방법은 최근방(nearest neighbor) 단위를 바탕으로 회귀모형을 통해 적합한 값을 찾아 이를 대응하는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PMM은 Rubin(1986)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Little(1988)이 통계적으로 발전시킨 매칭방법으로, 회귀방법과 최근방회귀와는 두 가지 대체 방법을 혼합한 형태이다.

PMM은 선형예측치를 얻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다. 이렇게 예측된 값은

실제 조사값을 가진 가장 최근방의 집합을 형성하기 위한 거리의 지표로서 사용한다. 이 후에 이 집합에 속에서 무작위로 뽑힌 값이 대체 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PMM에 의한 대체이다. 본 연구 자료는 기준 시점인 15차에 영유아 혹은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정보를 바탕으로 15차에서 가임여성이 있는 가구에서 관찰되지 않는 결측치인 사교육비 정보를 PMM 접근법을 통해 대체한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추계한 자녀 1인당 기대교육비용과 관찰 기간인 5년 동안 신규 출산한 자녀 유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로짓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패리티 이행 모형(Parity Progression Model)을 통해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에 기대교육비용이 미치는 영향도 향후 강건성 검증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종속변수를 신규 출산여부 이외에도 자녀의 수일때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인 부인과 남편의 연령 및 교육 수준, 자가 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설명변수(control variable)들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나누어 부모의 교육 수준 변수를 각각 세 분류로 한다. 거주 지역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제 5 장 연구 결과

우선 19차 조사 시점에 생애 주기 상 출산이 완료되는 41세에 도달하는 어머니에 해당하는 가구를 15차 조사시점의 분석 대상(15차 조사 당시 모 연령 35세 이하 가구)으로 하여 기대교육비용과 5년간의 신규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15차에서 19차까지의 신규 출산 여부라는 더미변수(출산 있는 경우=1, 출산 없는 경우=0)이므로 로짓모형으로 분석한다. 분석 시에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고등학생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주택 보유유무(자가=1, 전세 등 비자가=0), 거주 지역(서울 및 6대 광역시, 지방소도시, 농촌 등 그 외 지역), 소득 등을 제어변수로서 추가한다. <표 4>의 처음 네 개의 열에서는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각각의 기대교육비용이 신규자녀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마지막 열에서는 자녀의 학령별 기대교육비용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신규자녀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그 결과, 미취학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높을수록 신규 출산을 할 확률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출산 직후 바로 마주하는 미취학자녀에 대해 예상하는 사교육비가 신규 출산을 하는 것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신규 출산과 기대 교육비용의 관계

신규 자녀 유무					
ln(기대교육비용)(월평균)					
미취학 자녀	-0.162***				-0.162***
	(0.06)				(0.06)
초등학생자녀		0.008			-0.002
		(0.08)			(0.08)
중학생 자녀			0.089		0.088
			(0.06)		(0.06)
고등학생 자녀				0.028	0.026
				(0.05)	(0.05)
어머니 연령	-0.137***	-0.161***	-0.163***	-0.161***	-0.138***
	(0.04)	(0.04)	(0.04)	(0.04)	(0.04)
아버지 연령	-0.078***	-0.081***	-0.081***	-0.082***	-0.078***
	(0.03)	(0.03)	(0.03)	(0.03)	(0.03)
어머니 교육수준(참조: 고등학교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104	0.108	0.064	0.089	0.037
	(0.22)	(0.22)	(0.22)	(0.22)	(0.2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133	0.151	0.111	0.150	0.091
	(0.25)	(0.25)	(0.25)	(0.25)	(0.25)

아버지 교육수준(참조: 고등학교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30	0.023	-0.023	0.022	-0.019
	(0.23)	(0.23)	(0.23)	(0.23)	(0.2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312	0.329	0.278	0.311	0.240
	(0.24)	(0.24)	(0.24)	(0.24)	(0.24)
log (연간 소득)	-0.116*	-0.144**	-0.140**	-0.145**	-0.114*
	(0.07)	(0.07)	(0.07)	(0.07)	(0.07)
집 소유 여부	0.049	0.035	0.017	0.038	0.034
	(0.17)	(0.17)	(0.17)	(0.17)	(0.17)
대도시	-0.115	-0.134	-0.123	-0.152	-0.122
	(0.23)	(0.23)	(0.23)	(0.23)	(0.23)
중소도시	0.464	0.435	0.575	0.446	0.615
	(0.38)	(0.37)	(0.38)	(0.37)	(0.39)
상수(constant)	7.491***	8.256***	8.090***	8.245***	7.291***
	(1.22)	(1.20)	(1.20)	(1.20)	(1.23)
Pseudo R2	0.088	0.079	0.081	0.079	0.091
분석대상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표본수	706	706	706	706	706

주: 부모의 교육 수준변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참조변수(reference variable)로 함; 거주 지역 분류 변수에서 그 외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변수의 참조변수로 함; 괄호 안은 표준 오차 (* p<0.1, ** p<0.05, *** p<0.01)

<표 5>에서는 위의 분석을 각 가구의 인구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른 기대교육비용이 신규출산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먼저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과 2년제 대학교 졸업 그룹을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부모를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한다. 그 결과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다른 각각의 경우에 모두 미취학 자녀의 기대교육비용이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치(estimate)의 규모(magnitude)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교육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 로짓 모형 분석 결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취학 자녀의 기대교육 비용이 신규 자녀 출산을 저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중학생 자녀 혹은 고등학생 자녀의 기대교육비용이 증가해도 신규 자녀 출산이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를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였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준년도인 2012년도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 상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소득 가구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 결과,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에 대해 저소득 가구는 신규 출산 확률이 줄이게 되고, 중학생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에 대해서는 고소득 가구의 신규 출산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의 부모의 교육수준별 분석과 함께 살펴보면 기대교육비용의 증가가 출산 행태에 주는 영향은 인구경제학적으로 부유한(wealth) 가구일수록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나, 가구의 사회경제학적인 수준에 따라 기대교육비용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의 5와 6열은 거주 지역별로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대도시 지역으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미취학자녀에 대한 기대비용이 신규 출산을 저해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규 출산과 기대 교육비용의 관계: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별

	신규 자녀 유무							
	어머니 교육수준 ¹⁾		아버지 교육수준		거주 지역 ²⁾		소득 수준 ³⁾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대도시	그 외	낮음	높음
ln(월평균 기대교육비용)								
미취학 자녀	-0.159* *	-0.169*	-0.204* *	-0.154*	-0.159	-0.203* **	-0.208* **	-0.098
	(0.07)	(0.10)	(0.08)	(0.08)	(0.13)	(0.06)	(0.07)	(0.10)
초등학생자녀	-0.006	-0.016	0.003	-0.040	-0.023	0.004	-0.043	0.022
	(0.10)	(0.14)	(0.11)	(0.11)	(0.20)	(0.09)	(0.10)	(0.15)
중학생 자녀	0.110	0.046	0.011	0.174*	0.046	0.055	0.057	0.203*
	(0.07)	(0.12)	(0.08)	(0.09)	(0.14)	(0.07)	(0.07)	(0.11)
고등학생 자녀	-0.013	0.162*	-0.023	0.081	0.109	0.009	0.041	-0.034
	(0.06)	(0.09)	(0.07)	(0.07)	(0.12)	(0.05)	(0.06)	(0.09)
제어 변수 ⁴⁾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Pseudo R2	0.082	0.173	0.116	0.097	0.113	0.104	0.076	0.170
분석대상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표본수	475	231	394	312	121	585	466	240

주: 1) 부모의 교육수준을 2년제 졸업 이하, 4년제 졸업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 2) 거주지역을 기준으로하여 서울 및 광역시 거주와 중소도시 및 그 외지역으로 나눔; 3) 소득수준은 통계청 발표 2012년 소득10분위 기준으로 6분위값을 참고로 가구연간소득이 그 이상이면 소득이 높은 가구로, 이하이면 소득이 낮은 가구로 구분; 4) 제어변수에는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연간소득, 주거상태, 거주지역이 포함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신규출산 외에도 전체 자녀수에 기대교육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완결출산력을 주요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표 6>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나 완결출산력은 주로 재생산이 끝난 것으로 파악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향후 강건성 검증 시, 조사 대상을 2016년 당시 출산행태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는 40세 초과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분석 결과,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과 중학생자녀에 대한 기대비용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교육비용 높을수록 최종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16년 당시 40세 초과 가구 즉, 2012년 당시 35세를 초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의 3열) 즉, 부유한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완결 출산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며, 추정된 기대교육비용은 가구의 사회경제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부유한 가구일수록 그 비용도 높게 추정되므로, 결국 기대교육비용의 증가가 전체 가구 대상으로 했을 때는 완결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도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표 6> 전체 자녀수와 기대교육비용의 관계

전체 자녀수					
ln(월평균 기대교육비용)					
미취학 자녀	0.021*			0.022*	
	(0.01)			(0.01)	
초등학생자녀		-0.015			-0.019
		(0.02)			(0.02)
중학생 자녀			0.026**		0.029**
			(0.01)		(0.01)
고등학생 자녀				-0.014	-0.014
				(0.01)	(0.01)
어머니 연령	-0.013**	-0.013**	-0.013**	-0.013**	-0.013**
	(0.01)	(0.01)	(0.01)	(0.01)	(0.01)
아버지 연령	0.009	0.008	0.009	0.009	0.009
	(0.01)	(0.01)	(0.01)	(0.01)	(0.01)
어머니 교육수준(참조: 고등학교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31	-0.025	-0.042	-0.015	-0.030
	(0.05)	(0.05)	(0.05)	(0.05)	(0.0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068	-0.068	-0.080	-0.066	-0.081
	(0.05)	(0.05)	(0.05)	(0.05)	(0.05)
아버지 교육수준(참조: 고등학교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74	-0.067	-0.082	-0.071	-0.078
	(0.05)	(0.05)	(0.05)	(0.05)	(0.0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060 (0.05)	-0.051 (0.05)	-0.067 (0.05)	-0.047 (0.05)	-0.051 (0.05)
log (연간 소득)	-0.002 (0.02)	0.003 (0.02)	0.001 (0.02)	0.003 (0.02)	0.000 (0.02)
집 소유 여부	0.046 (0.04)	0.049 (0.04)	0.040 (0.04)	0.044 (0.04)	0.042 (0.04)
대도시	-0.047 (0.05)	-0.043 (0.05)	-0.045 (0.05)	-0.035 (0.05)	-0.035 (0.05)
중소도시	-0.044 (0.08)	-0.042 (0.08)	-0.006 (0.08)	-0.044 (0.08)	-0.006 (0.08)
상수(constant)	2.160*** (0.18)	2.189*** (0.18)	2.100*** (0.18)	2.165*** (0.18)	2.158*** (0.18)
R-squared	0.012	0.011	0.013	0.011	0.018
표본수	1553	1553	1553	1553	1553

주: 부모의 교육 수준변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참조변수(reference variable)로 함; 거주 지역 분류 변수에서 그 외 지역을 참조변수로 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표 7>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기대교육비용이 완결출산력에 미치는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거주지역이 대도시일수록 미취학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기대 비용이 크게 완결 출산력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기대 비용은 완결 출산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인구경제학적 계층이 높은 경우 교육비에 대한 기대비용도 높고 출산도 많이 할 확률이 높음에 따라, 미취학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기대비용과 완결 출산력이 교육수준이 높거나 대도시 거주 가구일수록 그 상관관계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전체 자녀수와 기대교육비용의 관계: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성별

	전체 자녀수							
	어머니 교육수준 ¹⁾		아버지 교육수준		거주 지역 ²⁾		소득 수준 ³⁾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대도시	그 외	낮음	높음
ln(기대교육비용)								
미취학 자녀	0.023 (0.01)	0.009 (0.02)	0.005 (0.02)	0.031* (0.02)	0.048* (0.03)	0.011 (0.01)	0.016 (0.02)	0.022 (0.02)
초등학생자녀	-0.009 (0.02)	-0.039 (0.03)	-0.018 (0.02)	-0.032 (0.02)	-0.013 (0.04)	-0.021 (0.02)	-0.022 (0.02)	-0.026 (0.03)

중학생 자녀	0.033* *	0.011	0.025	0.030	0.012	0.032* *	0.027*	0.024
	(0.01)	(0.02)	(0.02)	(0.02)	(0.03)	(0.01)	(0.02)	(0.02)
고등학생 자녀	-0.025 **	-0.002	-0.030 **	-0.001	-0.033	-0.009	-0.011	-0.024
	(0.01)	(0.02)	(0.01)	(0.01)	(0.02)	(0.01)	(0.01)	(0.02)
제어 변수 ⁴⁾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squared	0.019	0.029	0.027	0.024	0.059	0.019	0.014	0.054
표본수	1061	492	879	674	301	1252	967	586

주: 1) 부모의 교육수준을 2년제 졸업 이하, 4년제 졸업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 2)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 및 광역시 거주와 중소도시 및 그 외지역으로 나눔; 3) 소득수준은 통계청 발표 2015년 소득10분위 기준으로 6분위값을 참고로 가구연간소득이 그 이상이면 소득이 높은 가구로, 이하이면 소득이 낮은 가구로 구분; 4) 제어변수에는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연간소득, 주거상태, 거주지역이 포함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주요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시, 신규 출산 여부를 살펴 볼 때는 만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전체 자녀수를 분석할 때는 모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분석 대상의 변경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강건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2012년 시점에 1명의 자녀를 보유한 가구의 추가 출산 여부에 기대교육비용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패리티 이행 분석 결과는 <표 8>의 2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추가출산에는 기대교육비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을 변경하여 신규 자녀 유무를 종속변수로 할 때는 모의 연령이 2012년에 40세 이하인 가구만 대상, 전체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할 때는 모의 연령이 2012년에 35세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표 8>의 1열과 3열에 그 결과를 보여준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40세 이하로 분석대상을 넓힌 경우에도 여전히 신규 출산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대상을 좁힌 경우에는 전체 자녀수에 기대교육비용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종속변수를 신규로 출산하는 자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도 함께 소개한다. 그 결과,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신규로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강건성 검증

종속변수	신규 자녀 유무		자녀수	신규 출산 자녀수	
ln(기대교육비용)					
미취학 자녀	-0.154*** (0.04)	-0.058 (0.04)	0.018 (0.02)	-0.051*** (0.01)	-0.059*** (0.02)
초등학생 자녀	-0.064 (0.06)	-0.024 (0.06)	-0.024 (0.02)	-0.004 (0.01)	0.020 (0.02)
중학생 자녀	0.008 (0.04)	0.076 (0.05)	0.034** (0.02)	0.003 (0.01)	0.004 (0.02)
고등학생 자녀	-0.018	-0.037	-0.012	-0.001	0.007
제어 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분석대상	40세 이하	1자녀 보유	35세 초과	전체	35세 이하
Pseudo R2	0.066	0.047			
R-squared			0.029	0.072	0.136
표본수	1360	854	913	1553	640

주: 제어변수에는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연간소득, 주거상태, 거주지역이 포함됨.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제 6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에 초점을 둔다. 가구가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자가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 현재 시점에 관찰 가능한 요인 뿐 아니라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비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게 된다. 다른 국가와 달리 교육열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예상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미취학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출산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규 출산 여부와 신규 출산 자녀수와 자녀에 대한 학령별 기대교육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분석 대상을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으로 나누면, 사회경제학적으로 높은 가구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잃으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거나 소득이 하위 50%에 속한 가구에게는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가구와 같이 사회경제학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한 가구일수록 자녀에 대한 예측되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신규 출산이 아닌 전체 자녀수를 대상으로 보면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과 총 자녀수와의 관계가 양의 추정치를 나타내어, 영유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비용이 높은 가구일수록 완결출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가구일수록 기대교육비용이 높을 것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가구일수록 출산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대교육비용이 가구의 인구경제학적 특징을 기초로 예측된 값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완결출산력과 기대교육비용이 양의 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대교육비용 상승으로 자녀의 수 감소 효과보다 사회경제학적으로 높은 지위여서 자녀의 수 증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써, 기대교육비용이 증가하면 완결출산력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영유아에 대한 양육 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학령의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을 보유했을 때 가구가 가지는 교육비 지출 부담과 저출산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주거, 음식, 건강, 광열 등 중에서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출산 행태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비용보다 자녀를 출산하고

바로 지출이 예상되는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출산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특징에 따라 관련성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등에 지출 경감과 더불어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양육 부담과 더불어 교육정책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한국의 출산을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한 가구일수록 증가하는 자녀의 사교육비로 인해 출산행태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저출산 정책 마련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South Korean youngsters back at the bottom of OECD happiness rank. HANKYOREH, 2016. 3. 3.
- 교육통계서비스. (2015).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accessed on 2019. 1. 28, retrived from:
http://std.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5&cd=4240&survSeq=2018&itemCode=01&menuId=m_01050202&uppCd1=01050202&uppCd2=01050202&flag=A)
- 김경근, 최윤진. (2017). 교육열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중산층 기혼자의 자녀수 결정 배경과 양육방식. *교육사회연구*, 27(2), 1-34
- 김선숙, 백학영. (2014).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3), 129-157.
- 김성현, 주동범. (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3(3), 569-583
- 김승권 외. (2012). 20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주. (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49-157.
- 김은정. (2013).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91 (발행날짜 2013. 5. 24)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종훈. (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55, 61-74.
- 김현숙. (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07-135.
- 노충래, 김설희. (2012). 중학생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적이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우울분할에 대한 개인요인 및 사회적 지지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9, 39-68
- 대한민국정부. (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마강래, 강은택, 임보영 (2016). 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민현주, 김은지. (2011).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4), 198-222.
- 박문수, 최재영, 박지혜. (2014).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과 시사점-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보고서
- 박성준, 오유진. (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15(1), 91-112.

- 박종서. (2015).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293호.
- 박휴용, 여영기. (2014).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5, 69-95.
- 배정연, 홍석자. (2010). 기혼직장여성의 출산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7(1). 131-150.
- 변수정, 황남희. (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58, 41-61.
- 서문희. (2008).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이 추가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 연구, 4(2), 76-95.
- 성낙일, 박선권. (2012).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인구학, 35(2), 73-101.
- 손승영. (2005).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 젠더연구, 10, 5-25.
-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신윤정, 김지윤. (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 성태운, 최은영. (20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 유경원. (2010). 교육비 부담이 가계 저축 및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1(4). 135-160.
- 유병규, 조호정, 김동열. (2012).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 주평. 현대경제연구원.
- 이규복, 이석호 (2017).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관련 비용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KIF 연구보고서, 2017 (10), 1-99.
- 이보라. (2017). 정부정책신뢰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박사논문.
-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2014).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53-184.
- 이선정, 김정석. (2017). 교육비지출이 중년기 남성가구주의 우울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의 차등적 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8(2), 189-203.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재완. (2013).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

- 선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89-223.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정성호. (2013).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한국인구학, 36(2), 27-44.
- 정운태. (2018). 여성의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출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2), 219-241.
- 차문경, 이희태. (2017). 소득불평등이 교육비지출을 매개로 소비자의 행복한 삶,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 예상된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20(3), 143-168.
- 최성은, 우석진. (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7).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 통계청. (2018).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홍찬숙. (2013). 1980~90년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 : 젠더 불평등 및 그 문화적 의미. 한국여성학, 29(3), 1-40.

[해외문헌]

- Adsera, A. (2004).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1), 17-43.
- Anderson, T., and Kohler, H.-P. (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9(2). 196-215.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Fitzmons, P. (2015). Human capital theory and educ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https://doi.org/10.1007/978-981-287-532-7>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eference theory*, Routledge, London
- Hakim, C. (2003).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fertility patterns: Preference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3), 349-374.
- Hilgeman, C., & Butts, C. T. (2009).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 welfare regime paradox. *Social Science Research*, 38(1), 103-117.
- Hirschman, C. (1994). Why fertility chan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1), 203-233.

- Hoorens, S., Jack Clift, Laura Staetsky, Barbara Janta, Stephanie Diepeveen, Molly Morgan Jones, and Jonathan Grant. (2011). Europe's demography: Are babies back?. RAND Cooperation
- Kim, H. S. (2014).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0(3), 252-273.
- Little, R. A. (1988). Missing-data Adjustemnts in Large Survey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6: 287—296
- Martin, S. P. (2000). Diverging fertility among US women who delay childbearing past age 30. *Demography*, 37(4), 523-533.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cDonald, P. (2001). Theory pertaining to low fert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21-23.
- Morgan, S. P., & Taylor, M. G. (2006). Low fertility at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375-399.
- Myrskylä, M., Kohler, H. P., & Billari, F. (2011). High development and fertility: fertility at older reproductive ages and gender equality explain the positive link.
- OECD (2019),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indicator). doi: 10.1787/6e70bede-en (Accessed on 29 January 2019)
- Ogawa, N., Mason, A., Lee, S. H., Tung, A. C., & Matsukura, R. (2015). Very low fertility and the high costs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n East Asia. In *Low Fertility and Reproductive Health in East Asia*. Springer Netherlands, 31-58.
- Olaniyan, D.A. & Okemakinde, T. (2008). Human Capital Theory: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Development. *Parkistan Journal Of Social Science*, 5(5), 479-483.
- Rubin, D. B. (1986). Statistical matching using file concatenation with adjusted weights and multiple imputation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4: 87-94.
- Sleebo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